

[성명] 5.18 국가가 자행한 성폭력과 ‘성고문’, 철저하게 진상조사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라

최근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과 수사관들에 의해 자행된 성폭력, ‘성고문’에 대한 피해 여성들의 미투운동이 잇따르고 있다. 그동안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조사와 연구 등이 진행되어왔지만, 여성들의 성폭력, ‘성고문’ 피해는 지난 38년 동안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가려져 왔다.

윤청자 5월민주여성회 부회장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여성들이 성폭력 피해에 대해서 말해왔지만, “전체 투쟁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우리 얘기만 내세우질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성폭력 문제는 민주화 운동 안에서도 늘 ‘대의’를 위해 후순위로 밀려야 하는 부차적 문제로 취급되어 왔다. 여성들의 피해 경험은 가부장적 가족과 사회, 국가에 의해 중첩적이고 체계적으로 은폐되어 온 것이다.

40여년 가까이 침묵을 강요당한 채 홀로 피해를 안고 살아온 여성들은 그 긴 세월동안 누구에게도 사과를 받지 못했다. 5·18민주유공자 김선옥 씨는 미투 운동으로 용기를 내었다고 말했다. 이제 여성들이 세상을 향해 피해를 증언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여성들의 미투 운동은 강간의 역사이자 가부장제 사회에서 국가폭력과 남성의 성폭력이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보여준다. 전시, 분쟁 상황에서 여성들은 다른 피해와 더불어 성폭력 피해를 중첩적으로 겪게 된다. 가부장적인 성별위계 사회가 이러한 여성들의 피해 경험을 어떻게 은폐하고 사소화 시키는지 우리 여성들은 수 십 년 간 보아왔다. 국가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은 성별권력관계에 의한 뿌리깊은 성차별적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고는 또 다시 반복될 수 있다.

이제 국가가 여성들의 목소리에 답해야 한다. 다시는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여성들은 앞으로의 진상규명을 주시할 것이다. 올해 9월 시행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가해자인 계엄군과 경찰 수사관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여 가해자를 처벌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여성들의 경험과 성폭력 피해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에 여성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을 명백히 밝혀 과거에 대한 청산이 이뤄져야 한다.

5.18민주화운동에 참가한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 증언은 현재 진행 중인 미투 운동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만큼 사회 곳곳에서 누적되어 온 피해를 드러내는 미투 운동은 계속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는 우리 사회의 성별위계에 의한 성차별, 성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미투 운동에 응답해야 할 것이다.

2018년 5월 14일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교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